

‘신입생 미달 사태’ 명진고 남녀 공학 전환 추진

교사 보복 해임·부정비리 잡음 ‘시끌’...학생들 진학 꺼려 검토위, 학생·학부모 설문 통해 내달 중순 전환 여부 결정

2년 동안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진 광주 명진고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 명진고 남녀 공학전환 검토위원회(검토위원회)를 열고 핵심 안건 등을 논의했다. 명진고는 광산구에 있는 여고로 그동안 교사 보복 해임과 부정·비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사립학교다.

명진고는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로 AI(인공지능) 선도 학교로서 남학생의 진학 수요가 있고, 여학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점 등을 꼽았다.

남녀 공학으로 전환해 신입생 모집에 활로를 열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명진고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226명 중 120명만 채웠다. 2022학년도에도 정원

285명 중 51명만 채우는 등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현재 3학년은 8학급 체제지만 1학년 2학급, 2학년 5개 학급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명진고가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는 이유는 손규대 교사 보복 해임 논란과 전 이사장 자녀들의 교감·교사 재직, 부정·비리 등으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입 평준화 전형에서 명진고 진학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원 미달로 명진고 교사 9명이 과원돼 순회 교사(인근 고등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교사)로 활동하는 등 학교는 구조조정과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명진고의 남녀 공학 전환 추진 요청에 대해 2023학년도 고입전형이 확정되는 다음달 중순 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토위원회는 광산구 중학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남녀 공학 전환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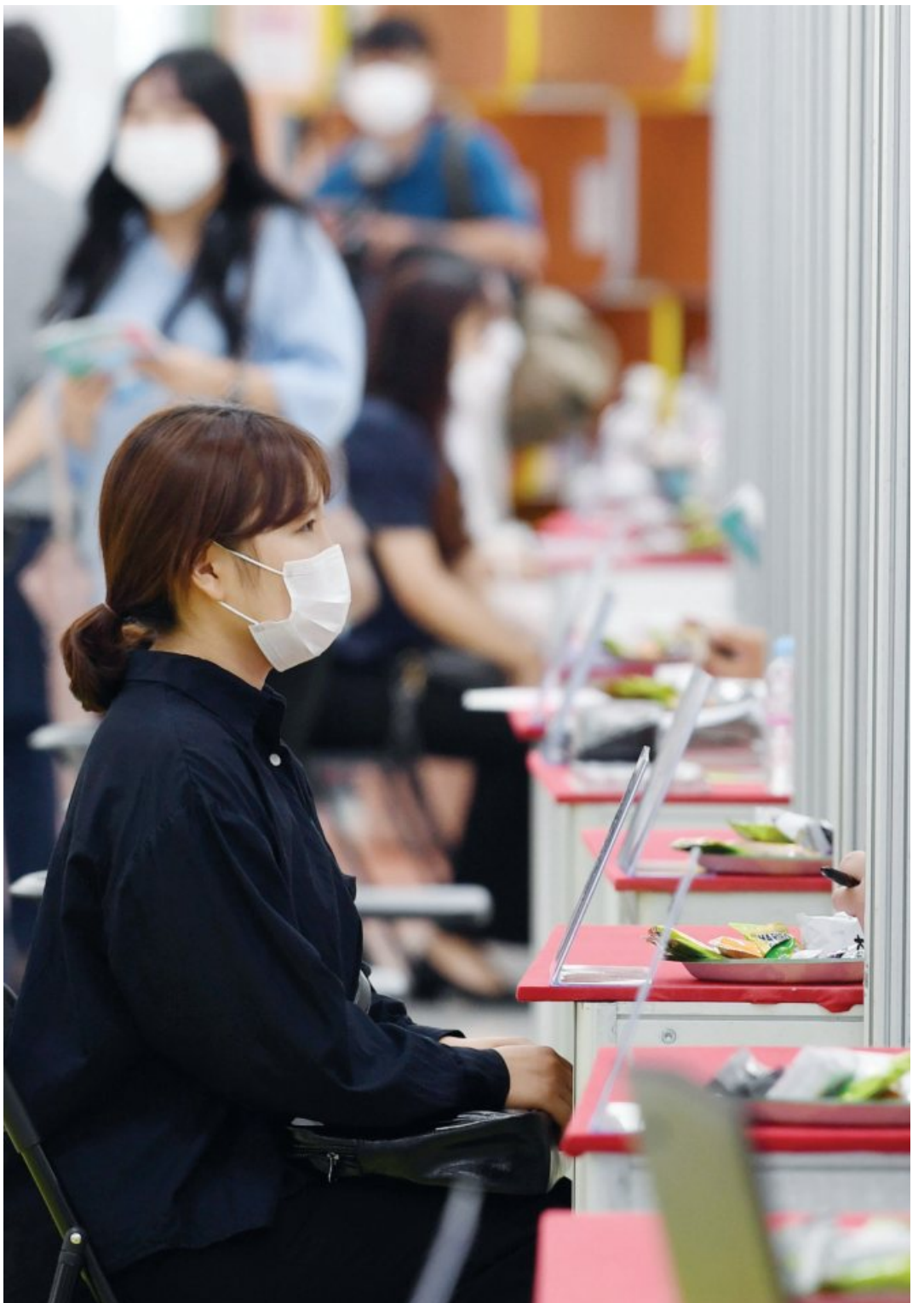
하고 인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명진고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면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는 내용도 포함된다.

명진고 재단의 투명성 강화 등 지구 노력 여부와 손규대 교사 해임 등에 따른 학내 문제 해결 등도 고려 대상이다.

명진고측은 최근 시교육청에 재단 전 이사장 자녀 등 친족이 학교 교장을 맡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채용도 시교육청에 위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한편 손규대 교사는 2018년 관할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최모 전 이사장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교사는 이후 해임 처분됐다.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7개월 만에 복직했으나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에 마련된 학생 책상에 앉아 근무하는 등 복직 후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따돌림'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계종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도 패소

재판부 "사찰로서 실제 인정 안 돼"

순천시를 상대로 선암사 부지에 세워진 전통 야생차 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을 낸 조계종 선암사가 최종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2부는 20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철거를 요구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제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로 볼 수도 없어 소송 자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순천시는 2004년 3월 선암사를 점유하던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44억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 건립을 추진했다. 2007년 10월 선암사 김목에 체험관 문을 열었고, 2008년에는 체험관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조계종 선암사가 "등기권자의 허가 없이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니 철거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고, 선암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다투는 등기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철거 소송 1·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래전부터 태고종 선암사가 사찰을 점유하고 신도 대다수도 태고종에 속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이 직권 조사를 통해 조계종 선암사가 철거 소송을 낼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최근 광주고법에서 열린 사찰 건물, 부지 관련 등기 소송에서도 등기 명의는 조계종 선암사 측에 있지만 소유권은 사찰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태고종 선암사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도료 폭탄 고지서’ 검침원 5명 중징계

10년 간 가구 방문 않고 평균 사용량 기재...주민들 누락분 청구에 반발 담양군, 1명 해임·4명 정직·감봉...요금 800만원 횡령·배임 등 고발키로

수도요금 '폭탄' 고지서와 요금 착복 문제로 물의를 빚은 담양군 소속 수도 검침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수도 검침원들이 매달 수용가(상하수도 사용 가구)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 등을 적발하고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을 했다.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의 수도 검침원들은 수용가를 방문하지 않고 기존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군 조례 등에 따르면 수용가 가구원 부재 등으로 검침할 수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수도요금 평균치를 부과하는 '인정 검침'이 허용되지만, 이들은 최장 10년간 수용가를 찾지 않고 인정 검침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담양군이 지난해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1549가구에 수도요금에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담양군은 뒤늦게 누락분을 추가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안내장을 발송하면서 '수도요금 폭탄 고지서' 논란이 일었다.

추가로 물어야 할 수도요금이 가구별(업제 포함)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고,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안내장에 담기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또한, 이들 검침원 중 1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상수도 요금 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담양군은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수도요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침원 5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죽림IC 보수공사로 22일까지 전면 차단

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죽림IC(북포방향) 구간이 22일까지 전면 차단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죽림IC(북포방향) 구간(5.2km) 2개 차로 전체가 오는 22일 자정까지 사흘간 긴급 차단된다. 20일 밝혔다.

차량 소통을 위해 우회도로는 무안IC-목포IC(국도1호 이용), 일로IC-목포IC(820번 지방도로 이용) 구간이 운영된다.

긴급 전면 차단은 서해안고속도로 비탈면 유실에 따른 보수공사 때문으로 공사구간은 2km에 이른다. 해당 경사면은 지난 18일부터 쏟아진 장맛비로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간은 하루 평균 1만264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일경험 드림사업’ 3년만에 재개 광주시청 시민소에서 20일 열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플러스 사업 ‘12기 드림남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가 상담을 하고 있다. 3년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 330명 모집에 1000여명이 지원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여론조사 조작’ 피소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무혐의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광산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박 구청장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시 조사 방법이나 문구, 공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했다

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질의해 최근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여론조사를 공표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점과 다른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